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42호

한반도 위기 진단과 해법

기획 취지

지난 1월 이후 시작된 한반도 위기가 몇 달째 지속되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 이후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특별 기획을 다음과 같이 8회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 [1] 2013년 한반도 위기와 중국의 고민, <주장환, 한신대 교수> (4/15)
- [2] 개성공단 정상화는 평화적 남북관계의 시금석,
<김진향, 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 (4/17)
- [3] 북핵위협, 억지용인가? 협상용인가? 국내정치용인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4/25)
- [4] 북한핵 피로감과 정치군사적 대응전략, <최종건, 연세대 교수> (4/26)
- [5] 1차 '신뢰 프로세스' 위기, 그 실태와 해법,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5/1)
- [6]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 진단,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5/3)
- [7] 한반도 위기와 통일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김창환, 미국 켄사스대학교 교수> (5/6)
- [8]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체화를 위한 4대과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5/14)

KNSI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 코리아연구원(이사장: 이재정 / 원장: 김연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 외교, 경제 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2013년 한반도 위기와 중국의 고민

주장환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한신대 교수)

- I. 2013년 한반도 위기와 중국
- II. 변화된 게임의 룰
- III. 중국의 고민
- IV. ‘송나라 양공의 어짊(宋襄之仁)’ 이 주는 교훈

I. 2013년 한반도 위기와 중국

2013년 한반도가 위기이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 과정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 왜 그럴까? 올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장들이 존재한다. 크게 세 가지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주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과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중국을 추동하여 북한의 행동을 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 깊은 양국 간 공조를 통해 중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 고민되고 제출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역시 3월 8일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찬성하고 이후 금융 제재와 통관 업무 강화, 북한 노동자 비자 신청 거부 등 나름대로 압박 전술을 펴고 있지만 그 효과는 신통치 않아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후속 조치들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강경 태도를 바꾸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른 주장이 오히려 힘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과대평가되어 있고,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행위를 실제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월 핵실험을 막기 위해 중국 당정군의 모든 인맥이 동원되었으나 무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결국 한국과 미국 등 다른 주요 당사국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현실 상황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여전히 중요하다 하겠다.

한편 북한에 의해 촉발된 한반도 위기와 중국과 관련하여 그간 몇 차례의 유사한 경험을 통해 앞의 두 개와는 약간 다른 또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이 실제로 부재하던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으려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도 사실상 북한을 포기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중국이 묵인할 것이므로, 독자적이고 공세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신중 주장은 매우 호전적이고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지만 한반도 위기 발생 및 전개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시사점이 있다. 중국 역시 다른 관련국들과 마찬가지로의 지위로 조정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 위기와 중국을 보는 입장은 의지 결여설, 능력 부재설 그리고 북한 포기설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사실일까?

II. 변화된 게임의 룰

북중 관계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먼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중국은,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로, 정서나 감정 등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행위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현실적·논리적으로 중국이 한반도에 가지는 전략적 목표는 ‘현상유지+ α ’이다. 자신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의 현상유지 즉 중국에 친화적인 북한 정권의 생존과 이로 인한 한반도 분단 체제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역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입장 즉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다. 또 이의 실현을 위해 중국은 때로는 북한을 압박하기도 때로는 북한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 대해 북한이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은 현상 타파를 주요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해왔다. 그 결과물이 핵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핵개발은 자신을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주고, 그렇다고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때로 방해까지도 하는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승부수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논리적으로 핵이 없던 시기 북중 관계는 강대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보호자 게임’의 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제고시키면서 게임의 룰이 바뀔 가능성이 생겨났다. 구체적인 게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으나 분명한 점은 북한의 선택 폭이 상대적으로 넓어진 치킨, 교착 등 여러 가지의 대칭적 게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최근 북한이 예상외로(?) 대차게 나가는 것은 김정은의 치기어림도 아니고, 자포자기도 아닌 핵 개발 이후 변화된 스스로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거한 것이다. 때마침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대로, 이란 등 국가들이 핵 기술 이전 및 판매를 매개로 새롭게 친구를 맺자고 적극 대시 중이기로 하다. 국제사회에서 몸값이 높아졌다는 방증이다.

중국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예전과 같이 북한이 문제를 야기하면 시간을 좀 끌다가 중국이 특사를 보내어 메신저 역할을 하고, 그러면 못 이기는 척 만나주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으면 선물이 주어지고, 그다음 슬그머니 회담장으로 복귀하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앞에 나열한 중국의 의지 결여설, 능력 부재설 그리고 북한 포기설 등은 양국 관계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그 적실성이 일정하게 결여됐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은 변화된 게임의 룰을 어떻게 하면 자국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Ⅲ. 중국의 고민

실제로 중국의 고민은 매우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표면적으로 중국은 기존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깨거나 이를 조장하는 북한을 위시한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 등 각국의 행태를 공히 비판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6자 회담 틀에서의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또 관영 매체의 공간까지도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된 논쟁을 허용하고 있다. 이른바 북한 부담론과 현상 유지론 간의 논쟁이다.

전자는 북한 포기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골자는 북한이 중조우호조약의 제1조와 제4조에서 규정한 ‘양국의 공동 이익과 관련한 일체의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등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도를 넘어섰으며, 그 결과 이미 지역 안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핵 포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든지 아니면 무력 충돌, 정권 붕괴를 최악의 상황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위기관리를 통한 현상 유지론이다. 여전히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그 의의가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관리할 수밖에 없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견해다. 물론 이 논쟁 또한 2009년 북한의 제 2차 핵실험 이후에도 진행된 바 있기 때문에 그리 신선하지 않다.

이런 표면적인 태도와 달리 중국은 실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고민의 주된 내용은 변화된 게임의 룰 하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즉 압박과 제재 혹은 현상 유지 등의 방식으로 이미 핵보유국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행보를 막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그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제3차 핵 실험은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에게 각각의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중국에게는 북한이 ‘지금처럼은 못 살겠으니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일종의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 메시지는 전통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던 양국 관계의 일방적인 주도권을 북한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려는, 물론 절박함이라는 전반적인 기조 하에서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의 곤혹스러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핵을 가진 북한은 변화된 자신의 처지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 요구를 들어주면, 미국과 한국 등의 국가들과 관계 소원을 감수해야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보증도 없다. 그러나 거부한다면 최악의 경우 양국관계가 비우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현실이 중국 앞에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상황에서 중국은 독한 마음을 먹고 북한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북한을 바꾸기 위해 나서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포기하기에는 자칫하면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영향력 하에 둘 수도 있다는 불이익이 마음에 걸린다. 또 북한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고 더구나 북한 지배 체제가 그 내구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 현실적이지 않다.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국력이 보다 강력해졌을 때 까지 한동안 위기관리를 해가면서 현상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클 것이나, 시간은 중국보다는 북한 편에서 있다. 즉 중국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IV. ‘송나라 양공의 어짊(宋襄之仁)’ 이 주는 교훈

결국 중국이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중대한 이면 합의를 근거로, 대화 국면으로 북한 핵 위기를 봉합하는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6자 회담 등 유명무실화된 다자 대화의 틀을 복원 시키려고 할 것이다. 한반도 위기 과정에서 제일 피로감이 높은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점에서 꼽을 수 있는 대가는 그동안 마뜩치 않아했던 북미 수교 등의 묵인 내지 허용과 함께 경제 발전을 위한 북한 측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등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중국과 한국 등 현재 북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국가들이 반드시 되새겨 봐야할 송양지인(宋襄之仁)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송나라의 양공이 전쟁에서 적에게 쓸데없이 인의를 호기롭게 베푼 탓에 도리어 패배를 당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데서 유래된 춘추시대의 이야기다. 초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대열을 갖추지 못하고 강을 건널 때도, 강을 건넌 이후 대오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도 그는 공격을 명하지 않았다. 그러한 행위가 어질지 못하다는 이유였다. 결국 대오를 갖춘 초나라와의 전투에서 송나라는 패하고 말았다.

이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면 원칙은 상황에 맞게 바꾸어 적용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정의, 어짊 등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을 현실 상황에 맞게 지키지 않으면, 무모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참고해봐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변화된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각 관련국들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이에 입각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을 간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013/04/15)



개성공단 정상화는 평화적 남북관계의 시금석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 소장)

- I. 개성공단 위기 - 인식의 전제
- II. 위기의 배경 및 심화구조
- III.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 IV. 개성공단에 응성

I. 개성공단 위기 - 인식의 전제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이후 2주가 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북미 간에 점증해오던 긴장고조가 개성공단까지 불뚱이 튀어 실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목전에서 아른거리고 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한다. 어떻게든 전쟁은 막고 대화를 통해 평화로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 어디에서 어떻게 꼬여 위기의 핵으로 등장했는지, 해법은 정말 없는지 북측의 입장까지 온전히 들여다보면서 분석해보자.

먼저 분명히 전제할 것이 있다. 첫째, 분단 60년 체제는 남과 북을 체제와 제도, 이념의 대립적 관계만큼이나 삶의 방식, 가치관, 사고방식, 가치 판단의 옳고 그름, 그 기준과 문화, 언어까지 너무 많이 다른 사회로 만들었고, 양 체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체계도 그렇게 너무 많이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

둘째, 남북관계는 철저히 상호작용의 관계이고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더불어 남북관계의 해법 모색은 늘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에 일방적일 수 없다.

셋째, 여하한 상황에서도 남북관계의 목표를 평화에 두고, 평화 지향적 관점에 익숙해야 한다. 즉, 북측을 극복의 대상으로 두는 순간 남북 공히 공멸일 수 있다는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최소한 상기 세 가지의 인식에 충분히 익숙해져야 남북관계를 평화적 관점에서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다. 남북관계는 평화-안보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그릇된 인식이나 사고 판단이 치명적으로 평화-안보를 깨트리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II. 위기의 배경 및 심화구조

현재의 한반도 긴장(개성공단 문제까지 포함)과 위기는 큰 틀에서 지난해 12월 이후의 북-미간 위기심화 구조(12월 인공위성 발사 - 미국 주도 안보리 제재 - 북 3차 핵실험 - 한·미 합동 키 리졸브훈련 - 북측, 정전협정 폐기 선언, 위기 심화 - 미국 의도적 무시전략 등)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북측은 인공위성 발사를 국가 자주권의 일환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발사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미간에는 물밑접촉을 통하여 상호 양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주도하여 강한 제재를 하게 되고, 이 상황은 북측이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격으로 인식되어졌다. 이후 3차 핵실험 강행 등 오바마 2기 정부 출범과 맞물리면서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엄혹한 기싸움, 살바싸움이 전개되면서 긴장이 상승되고 있었다.

오히려 북측은 이번 기회에 일관되게 주장해 오던 정전협정 폐기, 평화협정 체결의 근본문제를 풀고자 했고, 미국은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 와중에 터져 나온 것이 개성공단 출입 제한이다. 개성공단은 북측에게 평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나, 긴장이 고조되고 안보문제가 발생하면 공단지체가 북측에게 상당한 안보위험이 되는 곳이다.

그 이유는 첫째, 개성공단의 위치적 문제이다. 개성공단 건설로 북측 주력 군부대 1~2개 사단이 후방 10~15Km 후퇴했다. 즉 유사시 안보적으로 매우 취약한 곳이다. 둘째, 위기심화 시 공단 내 남측 근로자 추방, 소개부터 해야 하는데, 이것이 상황 전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셋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5만4천여 명의 경우 남측 주민들과의 일상적 접촉으로 체제 내적으로 긴장도가 매우 이완되는 곳으로 자본주의 황색바람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북측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남측 정부와 언론이 개성공단을 위기 심화의 구체적 장소로 명명하고, 자기 지도부의 존엄을 건드리는 상황까지 초래했으므로 더 이상 공단이 경제적 남북 상생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출입제한 조치 등 개성공단문제의 본질을 드러내 놓고자 한 것이다.

먼저 김관진 국방장관의 남측 근로자 ‘억류’가능성, ‘인질’상황 발생 시 ‘미 특수부대 투입’, ‘핵공격 징후 시 선제타격’, ‘5일 내 적 70% 궤멸’ 등의 설화들이 북측에게 상당한 안보적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언론과 전문가들이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는 것은 지도부(김정은)의 ‘달리박스’, ‘돈줄’이라고 한 것을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인식, 전격적인 출입제한과 북측 근로자 철수조치를 취한 것이다.

사실 북측이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가장 직접적 이유는 개성공단이 6.15 공동선언의 상징이고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경제적 유업이기 때문이다. 북측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오히려 남측 기업들이 자기들보다 몇 십 배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곳(남과 북이 모두 윈-윈 하는 곳)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관계의 어려운 시기에 북에 투자한 남측 기업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줘야 한다’고 한 바 있어,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남측이 ‘달러박스’ 식으로 호도하면서 자기 지도자의 존엄을 치명적으로 건드리고 안보적 위협으로 까지 변질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북측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이 최초 개발계획대로 확대·발전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2010년에 450개 기업이 진출하고 북측 근로자 10~15만 명 근무, 1단계 100만평 전체가 완전가동 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런데 MB정부 들어 모든 것이 중단되고, 기존 기업들만 제한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되자, 북측은 남측의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에 대해 늘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100만평 공단부지 중 40%만 공장이 들어섰고, 가동기업 123개, 근로자 5만3천명으로 기존 계획보다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의 위기가 상층 유지되는 또 다른 문제는 위기 심화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떠한 노력도 없었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북측이 압박을 통해 문제를 던지는 상황에서 구체적 대책 없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초기 10여 일간을 허비했다는 점이다. 결국 의도적 무시전략으로 사태는 심각해지고 문제 해결은 요원해지는,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생떼 쓰면 대화하고 만나주던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였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식 기준과 관점의 분석이고, 개성공단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남북 상호작용의 관계를 무시한 인식의 오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실지로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주는 임금 액수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이 순익을 창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북측은 공단부지 100만 평을 남측에 무상으로 제공했었다. 다만 우리는 기존 공단부지에 있었던 각종 지장물 철거비 명목으로 북측에 평당 1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상을 한 게 다였다. 그런 곳을 두고 남측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퍼주기’, ‘돈 줄’, ‘달러박스’라고 호도했던 것이다.

Ⅲ.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북측이 스스로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이 개성공단 정상화가 아닌, 안보위기를 점증시키는 태도로 나가게 되면 결국 개성공단은 폐쇄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북측은 폐쇄의 명분을 남측에 넘길 것이다.

즉 개성공단 폐쇄 상황은 북측이 판단하기에 남측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실질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다. 그것은 결국 북측이 개성공단을 자신들의 안보위협 요인으로 판단할 때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성공단이 북측의 안보위협요인이 아님을 보여주면 된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이다. 그것이 남북모두 윈-윈 하는 방안이다.

현 상황은 역으로 북측이 개성공단(대북정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상화 의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한다. 전쟁은 막고 대화를 통해 평화로 가야하는 것이다.

“북측의 선(先)변화 없이는 대화 없다”가 아니라 ‘북측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대화해야 한다.’ “선부터 큰 대화는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선부르지 않게 차분하고 진지하게 대화’하면 된다. 평화가 가장 큰 안보다. ‘결코 나쁜 평화 없고 결코 좋은 전쟁 없다.’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지키는 명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북측의 의도는 위기의 본질(정전체제 불안정성)을 다 꺼내놓고 이번에 한꺼번에 해결(평화협정)하자는 것이다. 그 본질적 의도를 평가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 위기를 단절시키고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만큼 더 절박한 우리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가?

의도적 무시, 대화부재 상황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대화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은 없다. 우리식 기준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폄하해왔던 북측이 우리식 기준에서 스스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야 따질 건 따지고 들을 것 들을 수 있다.

국민 생존권은 절대가치다. 즉 평화는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가치다. 절대가치를 무시하는 자의적 대화무시 전략은 민족공멸 가져올 수 있다. 후대만년에 걸쳐 참으로 어리석은 역사로 평가될 것이다. 민족공멸이라는 역사적 민족사적 위기 앞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겸허해져야 한다.

IV. 개성공단에 융성 변영하는 남북의 평화적 미래가 있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상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대립과 분단을 넘는 평화! 평화상품을 만드는 곳이다. 개성공단은 매일매일 작은 통일들이 발현되는 기적의 장소다. 이 순간에도 피눈물 흘리고 있는 수천 수만의 개성공단 기업인과 그 직원들, 협력업체 직원들의 한숨과 설움, 분통을 누군가는 닦아줘야 한다. 대화 없이 파국으로 가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부도의 위기에 놓여진다. 그분들의 피눈물을 정말 알아야하다. 70노구를 이끌고 매일같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기업인들, 모든 재산과 삶의 남은 모든 인생역정을 다 그곳에 바쳐서 10년을 지켜온 그분들과 모든 가족들의 삶, 모든 직원들의 삶 전체가 파탄날 수 있다.

그분들의 피눈물... 결국 누가 닦아 줄 것인가? 북측 정부인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우리 정부
여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그분들의 피눈물을 10분의 1이라도 인식한다면 지금 이순간도 참으로 아까
운 시간이다.

대화해야 한다.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가장 명예로운 일이
고 가장 명분 있는 가치다. 인식의 오류에 근거한 구태의연한 자존심이 수천수만 수십만 명의 우리 국
민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다.

절박한 전쟁의 위기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바로 대화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남
북 당국 간의 평화적 관계정상화와 맞물릴 수밖에 없다. 대화하자! (2013/04/17)



북핵 위협, 억지용인가? 협상용인가? 국내정치용인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 I. 북한 핵위협에 대한 시각
- II.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대남전략
- III. 북한의 이상 행동
- IV. 북한핵은 협상용인가?
- V. 북한에 대한 악마화 이미지

I. 북한 핵위협에 대한 시각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세 가지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핵 위협은 군사적 억지력 확보라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핵 위협은 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을 벌여 한반도 정세의 새판을 짜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셋째, 핵 위협은 대외적 요인보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이라는 북한 내부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 국내정치용이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세 가지 입장에 대해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왜 핵위협이라는 극단적 강수를 두었나?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사회 주류 입장은 북한이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 위협을 도발했다는 시각이다. 이 시각에서도 두 가지로 그 입장이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대남 전면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공세적 운용의 목적으로 핵 위협을 가한다는 입장, 두 번째는 대남 군사적 열세를 보완하려는 방어적 운용 목적으로 핵 위협을 가한다는 입장이다.

II.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대남전략

공세적 운용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은 군사우위 달성한 후 한국을 위협 및 협박하여 적화통일 달성이라는 대남전략의 맥락에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핵 보복력 확보 후에 재래식 전력으로 남한을 기습 도발하는 “3일 전쟁”, “우리식 전면전 수행”에 대한 최종점검을 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부대 위주의 대규모 전면전보다 핵미사일 위협을 앞세운 전략 로켓군, 20만 특수부대, 기습전력(공기부양정, 잠수함, 저공침투기)의 운용을 통해 그들 표현대로 “통일대전”을

수행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본다. 주로 국방부와 군 관련 인사들의 시각이다. 그런데 이런 시각의 문제점은 북한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다.

이와 달리 또 다른 수정주의자들은 북한의 핵위협은 체제생존을 위한 억지력이라는 입장이다. 핵무기의 방어적 운용이 그 목적이라는 의미인데,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핵무기는 냉전 이후 북한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여 체제 생존을 유지하는 현상유지가 목적이다.

특히 1991년 걸프전 직후 북한 폭격 위협과 9.11테러 직후 미국의 북한 공격 위협을 경험한 극복은 최근 리비아의 가다피 몰락을 지켜보며 오직 핵무기만이 자신을 지켜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여기에 다 남측의 군사비 투자 확대로 재래식 전력의 열세에 처한 북한은 비대칭 전력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것이 핵 위협의 동기를 형성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시각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설명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는 의문이 있다. 첫째, 핵 보유가 북한에 어떤 안보이익을 제공했는가라는 점이다. 북의 핵 위협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연습이 올 3월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통해 더 가속화되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공격 개념은 2001년 미국의 핵태세검토(NPR)와 미 전략사령부(STRACOM)의 ‘개념계획 8022’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그 내용은 B-2 스텔스폭격기, B-52 전략폭격기의 지표관통형 핵폭탄(B-62-11), 핵추진 잠수함의 트라이던트 미사일, 항공모함 전투기의 핵 투발 등에 의해 다양화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방위적 핵 우산 제공을 초래한 북한의 조잡한 핵무기 개발은 아무래도 북한의 안보를 더 잠식한 것 아닐까?

Ⅲ. 북한의 이상 행동

둘째, 북한은 최근에 핵 개발 과정에 왜 은밀성을 도모하지 않았나 라는 점이다. 최고의 국가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미국에 공개(2011년 10월)한 데 이어 작년에 미사일 발사에 외신 기자를 초청(2012년 4월)하고 핵보유국을 헌법 명기하며 핵 무력 강화 법령을 제정하는 등, 북한의 태도는 마치 핵개발 과정을 국제사회가 알아달라는 듯이 보인다.

그 결과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결의가 채택되어 국제적 감시망이 강화된 것은 북한의 핵 개발을 더 어렵게 하고 지연시켰다. 정말 핵을 보유하려면 최대한 조용하고 은밀하게 추진하다가 어느 날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기정사실화 전략이 효과적인데, 북한은 왜 핵 개발 자체에도 불리한 여건을 자초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핵 보유 말고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닐까?

셋째, 북한 핵의 효용성의 문제다. 전 세계에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 중 미국을 핵으로 억지하는 국가가 있나? 설령 북한이 목표한 대로 핵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그 정도 갖고 미국과 ‘공포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확증파괴(MAD)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게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한다고 하지만 핵전쟁 상황에서 북한이 핵 운용을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미국과 주변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이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는 북이 애초에 목표로 했던 억지력의 효과도 의문시 된다.

IV. 북한핵은 협상용인가?

그렇다면 북핵 위협의 이면에 있는 다른 목적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살펴보자. 우리 사회의 자유주의자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첫 번째는 북한 핵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협상 도구이고, 두 번째는 개혁개방에 직면한 북한이 전환기적 과두체제를 형성하면서 외부의 적을 활용해 내부의 결속을 꾀한다는 국내정치용이라는 시각이다.

첫 번째 관점에 따르면 북한 핵은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한반도 '새판 짜기' 협상을 위한 도구이다.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미국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전개하여 왔다. 특히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3월 8일에 “모든 불가침합의를 폐기한다”며 “정전협정 백지화”를 공언한 것은 미국과의 더 큰 협상을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 이후에 평화협정이라는 새로운 한반도레짐이 창설되면 이것이 북한 생존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북미 관계 개선(수교) 및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다.

두 번째 관점에 따르면 북한의 핵 위협은 대외적인 원인이라기보다 권력이 재편되고 개방에 직면한 북한에 새로운 과두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에 일어난 현상이다. 단적인 예로 1994년 김일성 사망 시에는 한만국경이 6개월 간 폐쇄된 반면에 김정일 사망 시에는 단 3일에 불과했다. 이제는 휴대폰이 150만대나 보급된 북한도 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갈 수 없는 국제적 상호의존 체제에서 주민들이 동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환기에 김정은-군부 엘리트가 공유할 수 있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국가 엘리트들이 계속 적응할 수 있는 국내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핵 위협을 가한다는 시각이다. 또한 북한이 경제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전력에 의존하는 군비를 줄여야 하는데, 핵무기가 바로 그 여지를 제공한다. 정치-경제적 시각에 입각한 이러한 분석은 지난 3월 30일 북한 중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경제 병진노선 천명”으로 북한 스스로에 의해 표명된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V. 북한에 대한 악마화 이미지

첫째, 만일 협상이 목적이려면 남북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을 왜 중단시켰나? 이 조치는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달러뿐만 아니라 제3국의 외자유치도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 궁극적으로 경제가 목적이려면 이러한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둘째, 왜 전선을 한미 정부와 군대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으로 확대하였나? 북한 서방 언론을 향해 이 미지 정치를 하면서 남쪽 언론사와 금융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선정(사이버테러)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악마화 이미지', '미친 국가'라는 반감이 확산되어 향후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도 어려워진다.

셋째,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이 가능한가? 이제껏 평화체제와 경제발전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여 대외협상의 중요한 의제로 정립되어 왔다. 그런데 북한은 앞으로 핵을 가진 상황에서 경제적 고립이 심화될 처지다. 그렇다면 북한이 평화적 이미지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경제건설을 위한 대외 협력을 도모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이 유효하다면 제3의 새로운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북한의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에 그 원인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수령을 결사옹위”하며, “제국주의 미국을 응징 한다”는 집단적인 복수의 정서로 맺어져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유격대 국가, 극장정치를 통한 이벤트 정치로 통치가 이루어지며, 이 때문에 주로 국가 기념일에 위협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1992년에 완성된 김일성의 노작인 '세기와 더불어'에서는 미국을 상대하면서 상대방의 핵심과 후방을 타격하여 심리적 충격을 주는 전략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객관적 상황이 불리할수록 더 공세적 태도 과시한다. 여기에서 북한은 겪어 맞지 않게 미국과 대등한 핵 국가로서, 미국을 체벌하는 징벌자로서의 위상에 집착하는 소위 '위신의 정치' 행태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관점에도 의문은 있다. 첫째, 김정은 후계가 원활하다면 아무리 군사국가로서의 국가 정체성이 있다고 해도 과도한 핵 도발 이유가 있는가? 2012년에 당-군-정부의 원활한 세대교체는 이미 이루어졌지 않나?

둘째, 일찍이 모택동은 “전략이 투철할수록 전술은 유연하다”고 했다. 김일성의 '세기와 더불어'도 사실 가르치는 것은 유리한 전쟁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김정은은 이러한 가르침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북한의 정체성에 과연 부합되는지의 문제이다.

셋째, 구성된 이익의 중요한 축이 중국의 지지 아닌가? 굳이 중국이라는 북한 정체성의 중요한 한 축을 멀리하면서까지 위협을 구사하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맺어온 문화와 정체성에 의한 국제사회의 맥락(social context)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에 와서 왜 갑자기 새로운 행태와 정체성이 보여지는 것일까?

1962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관찰되자 케네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빌어먹을 미스테리”라고 투덜거린 바 있다.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바로 그러한 형국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투덜거릴 일이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즉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니었냐며 시선을 반대로 돌리는 것이다. 때마침 북한과 중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물밑 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이제 조금만 더 지켜보면 한반도 위기의 진정한 실체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013/04/25)



북한핵 피로감과 정치군사적 대응전략

최종건
(연세대 부교수)

- I. 북한의 말폭탄과 침착한 국민
- II. 군사행동이 위험한 이유
- III. 전작권 환수 차질 없이 진행해야
- IV.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

2013년 4월이 끝나간다. 그러나 여전히 기온은 오르락내리락 하며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없다. 이리다 바로 뜨거운 여름이 올 것이다. 지난 한달 한반도 안보 정세는 이 혼란스런 날씨와 같았다. 한반도 안정은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에 흩날리는 벗나무 꽃잎마냥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북한의 강도 높은 말 폭탄은 국내의 언론을 통해 한층 더 날카로운 위협으로 우리 국민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한미동맹은 세상에서 제일 파괴력이 큰 전폭기 (B-52와 B-2)와 세상에서 가장 민첩한 투명 전투기 (F-22)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며 북한에 강력한 방어와 체벌 의지를 선보였다. 그러다 보니 현 상황이 개성공단까지 폐쇄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다.

I. 북한의 말폭탄과 침착한 국민

국민은 불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였다.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 발언 때 불었던 생필품 사재기 현상은 없었다. 또한 북한이 평양과 서울의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안전을 위해 한반도를 떠나라’라는 엄포를 놓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우리는 불안하였지만 우리의 일상을 동요 없이 차분히 살았다.

필자는 정확히 20년 전에 대학을 들어가 2013년 올해 마흔이 되었다. 지난 20년 간 사사건건 북한 문제는 ‘X-세대’라고 하는 우리 세대의 발목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20년 간 중국은 엄청나게 성장하였고, 유럽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통합의 경로를 걷고 있다. 세상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진보의 경로를 걷고 있으며, 그 진보의 결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유럽인들의 평화로운 삶이 그러하며, 중국인들의 경제적 풍요가 그러하다. 그 사이, 우리 세대는 ‘북한의 핵’이라는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찢찢하지만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버거웠지만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좌우를 떠나 다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올 봄은 이 안보위기 때문에 너무도 고단하고 피곤하였다. 20년을 지속해온 이 북한의 핵문제, 그 피로감은 너무나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북한이 지겹다.

문제는 북한을 우리의 감정과 피로도 때문에 걱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은 냉정하여 우리의 선호와 상관없이 북한이라는 실체와 마주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북한에 대해 이 기회에 군사적 조치를 강하게 취하자는 의견들이 있다. 그도 그럴 만 하다. 북한문제가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옥죄었는가.

II. 군사행동이 위험한 이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반도 전투작전 환경의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선부른 군사적 행동이 그 성패를 떠나 우리 스스로에게 초래할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라고 하는 핵폭탄과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피해의 불균형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낸 이 경제적 발전은 한순간의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피해는 북쪽이 얻는 것보다 우리 쪽이 더 크다.

경제적 제재도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국제적 신용 불량자여서 온몸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경제제재라는 빨간 딱지를 몇 장 더 붙인다고 그들의 행동이 변할지는 의문시 된다. 또한 경제제재의 의도하지 않는 효과는 바로 북한 정권의 강화라는 점 그리고 취약인구계층인 여성과 아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재원을 정권 보위에 가장 기여하는 군부와 측근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정권당사자는 여성과 아동에 재원을 분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라크와 리비아와 같이 오랜 시간 경제제재 놓인 불량국가들의 경우 여성과 아동의 영양실조와 발육부진 문제는 매우 심각하였다. 이미 북한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경제제재를 풀자는 주장은 아니다. 단, 우리가 북한에 대한 체벌적 제재를 가할 때, 우리의 정책적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20년이 지속된 북한 핵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미 20년이 걸려 북한의 3차 핵실험까지 왔다. 그렇다면, 이미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

질서를 구성하는 상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향후 20년이 더 걸려도 풀리지 않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현실적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Ⅲ. 전작권 환수 차질 없이 진행해야

둘째, 북한의 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보적 사안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북 군사적 역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도발을 불용하고 체벌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평양에 확고히 보낸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실천적 대북역지력을 구비해야 한다. 따라서 전시작전권을 예정대로 2015년에 환수하고 완전한 군사작전통제권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을 때, 실천적 대북 역지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더욱이 북한의 도발 시 이를 방어하고 체벌 할 수 있는 정보체계와 무기체계를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불용하는 수단을 확보하여 한반도의 전쟁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 정권과 북한 인민을 구분해야 하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다. 따라서 경제제재에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동의 보건 향상을 위한 약품과 기타 물품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할 규범이기도 하지만, 남북 간의 기초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Ⅳ.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

넷째, 북한 정권과의 협상 및 교류에 관해서는 통일부의 권한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관료적, 정치적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통일부의 발언과 정책결정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순기능적인 국가 통치행위이므로 이를 국민이 적극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제공조는 지속적으로 이행하되, 한반도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필요하다. 따라서 6자회담 참가국 간의 국제공조를 주도하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비핵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때론 미국과의 공조에 있어 정책적 잡음을 파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 핵문제의 사활적 이익을 우리가 일차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한다는 인식적 기초를 강력히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당장 해결방안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보다 큰 호흡과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 상황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허울 좋은 환상이 될 지도 모르겠다. (2013/04/15)



1차 ‘신뢰 프로세스’ 위기, 그 실태와 해법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Ⅱ연구교수)

- I.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위기
- II. 대북제재 대상으로 전락한 개성공단
- III. 신뢰 프로세스의 신뢰성 문제
- IV.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

I.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위기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정책 브랜드로 내놓으면서 자신만만했다. 튼튼한 안보 아래 인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포부가 컸다.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적 이행은 ▷인도적 문제 해결, ▷당국간 대화, ▷호혜적 교류협력, ▷개성공단의 국제화, ▷북핵문제 해결 기여 등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도적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국간 대화가 부재한 상태에서 협력과 평화의 거점이 문 닫을 상태가 됐으니 신뢰 프로세스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출발한 지난 2월 한반도 정세는 평탄하지 않았다. 북한의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및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졌다. 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남북한과 미국의 새 최고지도자의 지도력이 국내외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다. 이 세 요소가 어우러지면서 한반도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최악의 긴장 상태로 빠져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가 출항하기 어려운 태풍이었다. 그러나 이 태풍은 신뢰 프로세스호의 약점과 선장의 역량 문제로 인해 더 세차 보였다.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의 결의 2094호 채택과 이어 미국의 일련의 핵 무력시위가 전개되면서 북미간 대결이 정세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핵 무력시위가 지나가고 한미간 독수리훈련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남북간 대결이 정세를 주도하는 듯하였다. 개성공단을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의 입에서 터져 왔다. 그런 상황에서 일회성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한 것으로 북한에 신뢰의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태부족이었다.

II. 대북제재 대상으로 전락한 개성공단

마침내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개성공단이 이 지경까지 된 데에는 역시 북핵문제를 둘러싼 관련국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충돌한 데서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개성공단이 평화와 협력의 중심에서 대북제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작금의 개성공단 사태의 불가피성을 남한 근로자의 신변안전에서 찾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처벌, 다시 말해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정황상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의 김정은 정권 길들이기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경제적 측면이나 군사적 측면에서 개성공단을 유지할 필요성이 극히 낮아졌고, 박근혜 정부의 반응을 도발로, 고위인사들의 발언을 모멸적으로 간주하고 있던 터에 연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과 미국의 군사협력 강화로 북한 군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는지도 모른다. 결국 남북한 정권은 개성공단을 통해 공유해온 상생과 평화의 공공재를 함께 파괴한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III. 신뢰 프로세스의 신뢰성 문제

이제 작금의 사태를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신뢰 프로세스의 틀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해법을 생각해 보자. 박근혜 정부 출범 2개월여 만에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것에는 박근혜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 사태나 의도하지 않은 요인이 작용했지만, 그것으로 작금의 사태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역할, 신뢰프로세스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남북관계만큼은 살려 협력의 기운을 조성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화와 협력은 보이지 않고 비난과 압박만이 무성하다. 안보, 강경, 제압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통일부마저 그 대열에 동참하고 고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 프로세스를 안보와 협력의 균형으로 가동하겠다고 해놓고 그 방향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안보 일변도의 접근을 상황 탓으로 돌린다면 신뢰 프로세스는 머리 속에만 있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신뢰 프로세스의 두 번째 추진 방향으로 단계적 이행을 제시했는데, 사실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언론,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았다. 핵심 지적 중 하나는 신뢰 프로세스의 신뢰성 문제였다. 불신이 구조화 되어 있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으로부터 신뢰 프로세스를 어떻게 신뢰받을 것인가. 다른 주변 국가들로부터도 마찬가지이다. 대내적인 신뢰 확보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부터의 신뢰이다. 대북 제재가 주도하는 국면에서 신뢰 프로세스 가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북에 전달하고 그 징표로 공약했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밝히고, 이를 위한 당국간 회의를 제시하고 거기서 북핵문제도 다루는 지혜를 발휘했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확대는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내적 신뢰도 제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

IV.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

이상의 조치는 실기한 것이 아니다. 우선, 개성공단을 남북 협력과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살려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진정성과 권위를 갖춰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원칙과 현실적 대안을 내외에 천명하고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할 필요가 있다. 춘궁기와 만성적 식량부족을 고려해 북한에 10만 톤 이상의 쌀을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 갖는 인도적 문제 해결 분위기 형성과 북한과의 신뢰 조성에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안보 일변도로 접근하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이 실패할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지상주의는 청와대의 ‘외교안보회의’라는 이름에서 잘 드러난다. 통일정책은 실종된 채 대북정책이 이 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즈음하여 안보태세 강화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못하지만 그것만으로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고 남북 화해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에 힘을 실어줘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는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교역을 시작으로 5.24 조치의 단계적 해제도 검토할 때가 됐다. 박 대통령은 신뢰 프로세스의 국제적 지지와 북한의 긍정적 반응 유도 차원에서, 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적 해결 의지를 피력하길 기대한다.

남북간 기싸움으로 대중의 생명과 재산이, 우리들의 꿈이 희생당하는 사태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위기에서 교훈을 찾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신뢰 프로세스를 위기에 구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 있다. 대북통일정책은 다른 어떤 정책 영역보다 대통령의 철학과 역량에 의존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7.4남북공동성명을 구현할 역사적 책임이 있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2013/05/01)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 진단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 I. 햇볕도 초코파이도 사라진 남북관계
- II. MD 재조정까지 거론하며 대화를 준비하는 미국
- III. 중국도 능수능란하게 고차방정식을 풀어
- IV. 화끈하게 사용한 한국판 벼랑끝 전술
- V.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 와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
- VI. 박정희도 고등전략을 구사할 줄 알아
- VII. 아웅산 테러 이후에 받은 북한의 수재지원물품

원조, 설교, 경제제재, 개입정책보다도 북한의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작고 동그란 달콤한 스낵이다. 마시멜로로 채워진 이 스낵은 이미 평양에서 전설적인 지위에 올랐다. 이 스낵은 평양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것은 한국의 변영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정도면 이미 눈치 챈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보급된 초코파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5월 1일자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 초코파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좀 부풀려서 말한다면 이습우화의 햇볕보다 더 빨리 초코파이가 나그네의 옷을 벗겼다고나 할까? 초코파이를 먹은 나그네는 곧 일광욕을 할 준비를 할 것이다.

I. 햇볕도 초코파이도 사라진 남북관계

하지만 북한에 내리쬐던 햇볕도 제공되던 초코파이도 모두 중단되었다. 나그네가 일광욕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팽팽한 기싸움으로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에서 외투자락 쥐어잡고 전투의 지만 높이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는 유리그릇이다. 남과 북은 유리그릇 위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내리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유리그릇을 깨고 말 것이다. 공멸이다. 남북의 지도자들은 이런 불안정한 한반도의 상황을 잘 알면서 상대방의 포기만을 압박하고 있다. 전형적인 치킨게임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나 협상을 말하면 비겁하거나 겁쟁이로 여겨진다.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오래 버티면 자존심을 채우고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강경책이 난무한다. 하지만 유리그릇 위에서 진행되는 기싸움은 어느 누구에게도 승리를 안기지 않는다. 이런 기싸움은 상대방의 강경대응을 유발시키고 결국은 양쪽 모두 재원만 소진한 채 대결과 긴장만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뿐이다.

기싸움은 ‘뇌간’이라고 불리는 상대방의 도마뱀 뇌만을 자극할 뿐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과 감정의 원천인 도마뱀뇌가 자극 받으면 이성과 논리는 사라진다. 오직 체면을 살리기 위한 강한 의지와 강력한 수단만이 요구된다.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북한은 쉽게 변화하지도 않지만, 쉽게 붕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북핵협상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우리가 북한체제를 전략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II. MD 재조정까지 거론하며 대화를 준비하는 미국

3월초부터 시작한 한미독수리훈련이 4월 30일에 마무리되었다. 미국은 존 케리 국무장관이 4월 12일에 서울을 방문 한 이후 서서히 대화를 위한 균형을 때기 시작했다. 이어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는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뒤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면 전진배치된 미사일 방어망(MD)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D체제를 추구하는 공화방의 반발이 빚발치자 예에 대해 중국과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에서 중국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이렇게 방치할 경우 2016년경이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미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 그래서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능력을 제거할 협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의회나 여론은 북한과 협상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므로 미국 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뽑아든 카드가 중국역할론이다. 미국은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의 중재가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아무런 수단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중국정부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이 같은 고차방정식을 풀어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의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지난 4월 18일에 △모든 도발 중지 및 전면 사죄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약속 △한국과 주변 지역에서의 전쟁수단 전면 철수 등이 대화의 조건이라고 밝혔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까지 했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런 북한의 발언을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협상에 대해 처음 언급했다는 것이고, 이는 협상을 위한 첫 번째 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이와 같은 처신은 4월 중순으로 예상했던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유예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4월 중순 이후 북한은 지난 1월말부터 지속해왔던 말폭탄 공세를 멈췄다.

미국 국무부의 조셉 윤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지난 4월 25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면 괌 미군기지에 배치한 MD미사일 방어망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4월 13일 베이징에서 한 존케리 국무장관의 발언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미국 정부는 MD 재조정 같은 국가전략의 수정을 중국에 대한 머리 숙이기라는 자존심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이익을 조정하는 협상전술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Ⅲ. 중국도 능수능란하게 고차방정식을 풀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중국에게도 고차방정식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북한은 언제까지 편들 수만 없다. 경제력이 성장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책임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을 포기할 경우에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조중 국경지역이 불안해지고 한미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것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 반대, 북한 불안정 반대, 북한핵 반대가 중국의 본질적인 이익이 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앞에서는 북한을 나무라고 뒤에서는 북한을 달래는 다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미국과 물밑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북미 사이에서 중재외교를 통해서 중국 앞에 놓인 고차방정식을 풀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위기가 고조되자 출범 직후부터 한동안 유지해왔던 차분한 기조에서 이탈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맞서 ‘중대조치’를 내걸면서 북한에 맞선 것이다. 이는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의 부족이고, 한국이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의 해법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북한에 밀릴 수 없다는 강박관념의 표현일 뿐이다. 남북관계에서 이런 강박관념이 바로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원천이다.

Ⅳ. 화끈하게 사용한 한국판벼랑끝전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북회담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부재와 부처 간 정책 조정능력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비판했던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한국판이다. 북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벼랑끝 전술을 한국이 화끈하게 사용한 것이다.

미국 언론들도 북한의 강경조치가 수그러들 때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인력철수조치를 취했다고 바라보았다. 특히 중국의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우더웨이)가 미국을 방문하여 북미대화의 조건 마련을 위한 협상을 하던 시점이었다. 또 윤병세 외무장관이 4월 24일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문제에 대한 한중 협의를 하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4월 25일 정부의 회담제안과 4월 26일 인원철수조치는 국제정세의 흐름과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통합적인 정책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1970년 이전의 남북관계는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였다. 1970년을 거치면서 ‘대화 있는 대결’을 거쳐서 2000년에 들어와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발전했던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1970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냉전시기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은 북한과 대결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을 겁쟁이나 비겁한 행동으로는 여기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대화의 수단을 꺼내들었다.

V.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 와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

1968년과 1969년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이후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였다. 1968년에는 북한의 124부대 소속 무장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1.21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뒤인 1월 23에는 북한해군함정이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르호를 나포했다. 또 그해 10월에는 130여명의 무장 게릴라들이 울진 삼척을 침투했다. 1969년 4월에는 북한군이 미군 EC 121 정찰기 격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 돌연 평화통일제안을 한다. 8.15평화통일구상에는 “1995년까지 남북한이 서로 반공이니 반동이니 하는 소리하지 말고 서로 평화를 지키면서...”라는 구절이 있다. 마치 1990년대에 재야인사들과 학생들이 1995년 통일원년을 내세우면서 통일운동을 활성화시켰을 때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이다.

당시 청와대의 입장은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에게 전쟁을 하지 말고 어느 체제가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가를 경쟁하자고 던져 주는 것이 전쟁억제를 위해 몇 십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등 전략”이라는 것이다.

VI. 박정희도 고등전략을 구사할 줄 알아

박정희 대통령의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의 요지는 ‘긴장상태의 완화를 거쳐 평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통일 이전에 긴장완화, 전쟁방지, 평화정착 등의 중간단계 설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이후 역대 한국정부 통일정책의 골격이 되었다.

이후 박정희는 본격적으로 대북협상을 준비하였다. 대북협상은 남북한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이에 따라서 1971년에 이산가족 재회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하였다. 북한이 수락하여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북대화 재개되었다. 남북 적십자회담을 거쳐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에 이른다. ‘선 인도주의 회담 → 후 남북당국자 회담’이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대화의 패턴은 이미 박정희 시절 그 기초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자존심 경쟁이 아닌 ‘고등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시작했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박정희가 구상한 대북 고등전략은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꽃을 피웠다. 박근혜 시대에는 오히려 고등전략이 자존심 경쟁이라는 하등전략으로 대체되고 있다.

물론 박정희의 고등전략이란 1969년 ‘아시아는 아시아의 손’으로 라는 닉슨 독트린과 이후 미중수교의 국제정세에 기인했던 것이다. 박정희가 대북정책을 독재정권 강화와 민주화세력 탄압으로 악용하였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맥락을 읽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는 분명 달랐다.

VII. 아웅산 테러 이후에 받은 북한의 수재지원물품

1983년에도 위기가 있었다. 9월에는 소련전투기에 의한 대한항공 격추사건이 발생했다. 10월에는 북한에 의한 아웅산 테러가 자행되었으며, 12월에는 다대포해안 간첩침투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은 이듬해인 1984년에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 개최를 제안한다. 이후 11월에는 남북경제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1985년에는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한다. 이러한 대화노력은 1985년 9월 최초의 역사적인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으로 이어진다.

전두환 정권 역시 광주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권력을 찬탈한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위해 남북대화를 이용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심지어 아웅산 테러 다음해인 1984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수재물자 지원도 받는다. 남북관계를 기싸움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정부에 간헐적으로 이어져온 대북정책에 대한 고등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세

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점은 이명박 정부와 차별적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 내에는 그런 세력이 전무했다.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창조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내기를 희망한다. 창조적인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을 뛰어 넘는 것이다. ‘대화 없는 대결시대’로 역사적으로 퇴행하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내부에 그런 고등전략을 구사할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지 자꾸만 회의감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2013/05/03)



한반도 위기와 통일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김창환
(미국 켈사스대학교 교수)

- I. 통일에 진지(?)했던 이명박 대통령
- II.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과학의 10대 난제
- III. 군사적 강경책은 포퓰리즘에 불과
- IV. 평화공존을 현실의 목표로

I. 통일에 진지(?)했던 이명박 대통령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필자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통일에 대해 진지했다고 믿는다. 그는 통일을 자주 얘기했다. 임기 중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며 중요하고 급한 문제로 통일세를 제안했고, 퇴임 연설에서는 한국의 미래가 통일에 달려 있고 서둘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의무와도 잘 맞는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66조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대통령의 진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대결로 점철되었다. 그의 임기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시작되었고,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마무리되었다. 같은 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시작은 개성공단의 잠정폐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통일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삼는다면, 다음 질문은 그 방법이다. 문제는 그 방법을 모른다. 어떤 식의 통일이든 통일은 체제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 있고, 체제의 변화는 곧 새로운 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도란 법률적 규정에 한정되지 않고, 장시간 유지되는 사회조직의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통일은 새로운 제도의 설립을 요구하지만, 한 사회의 제도가 어떻게 설립되고 유지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여러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한 번 제도가 성립되면 오래 지속된다는 것도 아는데, 도대체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

지 못한다. 2011년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뽑은 사회과학의 10대 난제 중 하나가 바로 효율적이고 유지 가능한 제도의 생성 문제였다.

II.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과학의 10대 난제

한 국가에 새로운 제도의 성립, 레짐체인지를 목표로 거대한 군사작전을 펼친 사례가 바로 부시 대통령 시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다. 있지도 않은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가 이라크 침공의 직접적 빌미였지만, 당시 신보수주의 이론가들은 후세인 정권 붕괴 후 들어설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가 중동 전체에 끼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다. 결과는 처참한 실패.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라 새로운 혼돈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 인류 사회는 기존 제도를 붕괴시키는 방법은 알지만 새로운 제도를 설립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재확인했다.

통일을 목표로 삼고 방법을 제시하는 건, 누구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을 자신은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북한이 주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이명박 정부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사실상의 내부 붕괴를 기대하는 흡수통일이나, 주식궁에 탱크를 몰고 들어가는 것이나 모두 마찬가지다.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던 두 체제 연방제 국가를 설립하여 통일을 이루겠다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애초부터 새로운 제도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필자에게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홍콩, 마카오가 전례가 되는 일국양제는 한 체제의 일방적 군사적 우위에 근거한다. 모두가 알 듯, 이 제도의 성공은 중국 체제의 자본주의화가 크게 작용했다.

군사, 정치적으로는 홍콩 마카오가 중국에 복속된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홍콩에 복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사적으로 비등한 두 체제가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제도는 통일로 가는 과도기가 아니라 내전으로 가는 첩경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두 체제, 두 제도의 양립은 주로 내전으로 해소되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III. 군사적 강경책은 포퓰리즘에 불과

전쟁이나 내부붕괴론은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이라크 침공론과 유사하다. 통일을 성취 가능한 목표로 삼는 대북 정책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남북 군사대결이나 대북공작에 치중하기 쉽다. 목표가 분명하고, 방법도 눈에 잘 보여서, 단기적으로 국민을 설득하여 인기를 누리기에 좋다.

하지만 이 정책은 그 과정에서 남북대결을 초래하고 설사 성공하더라도 결과는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북의 기존 체도를 파괴하고 통일을 선언할 수는 있겠지만, 그 후 어떻게 새로운 체도를 안정적으로 설립한다는 것인가? 북의 체제를 파괴시킨 후 이루어질 통일은 꿈에도 소원이었던 바를 이루는 축복이 되기보다는 오랫동안 씌워질 저주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39배,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19배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통일 전 1984년에 동독의 1인당 GDP는 서독의 90%에 달했다. 외환위기를 겪고 동독이 붕괴될 당시에 당시 서독과 동독의 1인당 소득 격차는 2배가 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비용은 매우 값비쌌다. 북한은 동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오랜 빈곤으로 북한 노동자의 기술수준, 신장, 두뇌발달이 저하되어 있다. 그나마 있는 생산시설도 국제 기준에 안 맞다. 다른 저개발국과 달리 노령화도 상당히 진행되어, 생산가능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다.

탈북 새터민들의 대한민국 적응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것을 보고 북한 주민도 이들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인 초기 이민자들은 건강하고 모험심이 강하고 개척정신이 높은 집단이어서 경제적 성공확률이 높지만, 난민은 자발적 이주민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빈곤 속에 산다.

인구학 연구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바다. 북한의 붕괴에 의한 통일은 5천만 인구의 국가가 2천 5백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과 유사하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다. 통일세 조금 걸어서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제 막 얘기를 시작한 복지국가건설과 같은 희망은 통일과 함께 거품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통일 후 남북한 주민 모두 오랜 시간 고통을 겪을 것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대 비극이 전쟁이라면, 그 다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은 갑작스런 통일이다.

IV. 평화공존을 현실의 목표로

지난 몇 년 간 보아왔듯이 통일은 극심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초래하는 주제다.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체제를 세우자는 것인지 합의하기 어렵다. 한 쪽은 중북세력으로 다른 쪽은 전쟁세력으로 몰며 싸웠다. 통일 논의는 내부의 분열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진보적 통일 논의는 남북 화합에 도움이 될까?

북한이 진보진영의 통일 논의를 반길지 적이 의심스럽다.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현실적으로 통일 후 체제는 북한의 현 체제보다는 남한의 현 체제에 훨씬 가까울 것이다.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북의 입장에서 남한의 모든 통일 논의는 북의 체제에 위협이 된다.

그래서 어찌자는 말인가? 통일은 잇자. 대신 통일은 미래에 우연히 찾아오는 상징적 목표로 삼고, 현재는 평화공존에 치중하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보와 보수 모두 평화를 바란다. 여야 모두 목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는 방법론의 효율성으로 한정된다. 박근혜 정부 설립 후 통일이라는 단어가 논의에서 사라지고 대신 평화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필자는 이 변화를 환영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조만간 북한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명박식 노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깨닫고서 통일보다는 평화에 방점을 둔 노선으로 필자는 이해한다.

미수금 명목의 142억 원을 지불하고 개성공단 잔류 인원 7명이 모두 귀환했다. 우리 국민이 북의 인질이 되는 우려스러운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두고 약간의 신뢰가 쌓였다고 평가했다. 긴장국면이 조성되자마자 포퓰리즘을 발휘해 국방외교 라인은 모두 전쟁 전문가로 채웠던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3/05/0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체화를 위한 4대 과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 I. 남북협상 방법론 개발과 대화 재개
- II.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동시 병행추진
- III. 6자회담을 재가동하여 서울프로세스 완성
- IV. 통일외교국방 통합조정능력 강화

지난 1월말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위기는 이제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위기극복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한반도의 위기는 만성적인 상태로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서울 프로세스를 제기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서울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오마이 뉴스와 코리아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해온 특집 한반도 위기진단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I. 남북협상 방법론 개발과 대화 재개

‘협상의 법칙’이란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허브 코헨’은 “협상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상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호의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것이 명성이든, 자유이든 아니면 돈이나 정의 또는 사랑, 사회적 지위, 신체적 안전 등 무엇이든 간에 누리고자 하는 온갖 것들을 협상을 통해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의 기법에 대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에서 로저 피쉬와 윌리엄 유리는 “협상은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본적인 수단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 전문가인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박사의 남북협상에 대한 지적은 흥미롭다. 그는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 요인들로는 △관련국들간의 불신 △북한의 국내정치적 특성과 요구, 취약성으로부터 초래된 행위들 △한미일 3국 정치체제의 특성과 대북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을 꼽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요인들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지 않고 ‘협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허브코헨이나 로저피쉬 같은 세계적인 협상이론가들에 따르면 우리는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협상이 아닌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무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남북대화에서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협상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에서 협상을 부정한다면 남북관계를 1970년대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다. 1970년 이전의 남북관계는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였다. 1970년에 접어들며 ‘대화 있는 대결’을 거쳐 2000년에 들어와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발전했던 것이다. 냉전시기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은 북한과 대결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을 겁쟁이나 비겁한 행동으로는 여기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대화의 수단을 꺼내들었다.

II.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동시 병행추진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서울 프로세스에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빠져 있다.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비핵화의 방법과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을 협의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므로 결국 중국의 역할을 높이는 통로인 6자회담을 피해갈 수 없다.

북한의 핵확산은 일본과 동북아 군비경쟁으로 이어지므로 중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중국은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동력이며서도 북한의 급변이 가져올 혼란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는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다. 즉 중국의 안전판이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견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지는 것이다. 중국은 어차피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없을 바에야 중국을 참여시키는 장기 북한 변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은 냉전이 해체되자마자 중국과 국교수립을 했다. 한국외교가 중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게 대북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인지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6자회담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남북대화, 북미대화, 4자회담, 6자회담 같은 다양한 대화채널이 형성되어서 각기 기능에 따른 접촉과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북과 함께 만들어 내고, 북미관계는 각종 대화의 유훈유로서 역할 할 수 있다. 4자회담에서는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를 논의 한다.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병렬해서 진행해 나가되 세부 합의사항들은 상호 연계시켜나가면서 평화체제 논의나 비핵화 회담의 상호 순기능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Ⅲ. 6자회담을 재가동하여 서울프로세스 완성

동북아에서 평화체제를 형성하다는 것은 이 지역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실존하는 여섯 개 나라들, 일, 중, 미, 러 남북한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관련된 문제들을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 외교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틀을 구축함을 의미한다.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북한,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등 쌍무적 동맹관계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와 조화시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이와 같은 쌍무적 동맹관계의 정치적 틀을 유지시키되, 그것들이 내포한 군사 중심적 성격들을 최소화해나가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울프로세스라고 일컫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비군사적인 요소에서 출발하므로 군사 중심적 성격을 최소화해 나가는 틀을 만들 맥야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성공하려면 북한 핵과 군사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미대화를 지원해서 6자 회담과 4자 회담의 촉매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궁극적으로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이 유사시 관련 국가를 지원하는 자동개입, 군사력의 전진배치 등에 대해 상대 역내 국가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 다자적 틀과 쌍무적 동맹체제가 공존할 수 있고, 보다 실질적인 다자간 대화와 협상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동북아 평화협력의 틀을 통해서 다자간 대화와 협상의 구조가 확고해지는 과정에서 쌍무적 동맹체제는 역내 국가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Ⅳ. 통일외교국방 통합조정능력 강화

박근혜 정부는 초기 대북정책 조정과정에서 큰 혼선을 빚었다. 통일부 장관이 사실상 대북대화를 제안하는 날 청와대에서는 이를 부정했다. 다시 대통령이 나서서 대북대화 제안이라고 바로잡았지만 다음 날 총리는 또 다른 소리를 했다.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는 혼란스런 모습을 보인 것이다.

청와대의 통합조정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외교, 국방, 정보라는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안보시스템에 한국에서는 통일문제가 추가로 결합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안보문제는 외교, 국방, 정보, 통일 이라는 4기 영역에서 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각각의 영역별로 접근하는 시각

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현대사회의 추세는 안보개념이 확대되어 ‘포괄적인 안보’가 일반화되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식량, 경제에 이르기까지 통합되는 현대사회의 특징에 맞게 안보개념도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처럼 안보개념이 확대되어 안보개념과 다른 개념이 뒤섞이는 추세이다. 외교, 국방, 정보, 통일 등 전통적인 안보영역에서 통합적 사고를 해서 전통적인 안보개념과 시각을 중심으로 환경, 에너지, 식량, 경제 등의 영역을 통섭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안보개념을 해체되어 다른 개념과 뒤섞이는 안보개념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통합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외교, 국방, 정보, 통일 각 영역별로 고유성을 확보한 후 상호 공통성과 공동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 가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외교는 국제적 시각을, 국방은 군사적 신뢰구축의 시각을, 통일은 민족화해적 시각을, 정보는 윤활유 역할을 모색하는 시각을 갖추고, 그 다음 공통의 목적인 국익실현의 길을 찾아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특수한 영역인 통일문제에 대해서 국익실현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3/05/14)

